행정안전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온기나눔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2. 27.(목) 12:00
(지 면) 2025. 2. 28.(금) 조간

- <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> 발표 -

중단·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 애로, 맞춤형으로 해소한다!

- 규제로 인해 중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규제 애로 해소 지원
- 지역 소상공인·자영업자, 주민 생활 등 관련 민생 규제 집중 개선
- 직능단체 간담회,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 규제 개선 과제 발굴

□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<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>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, 2월 27일(목)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'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'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①중단·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, ②지역 소상공인·자영업자·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며, ③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.

□ 첫째,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.

○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,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·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, 그 원인을 분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,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.

○ 또한, 지방규제혁신위원회*를 매월 개최하고,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, 관련 전문가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.

*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분야 자문기구(민관 합동 위원 15명)

○ 한편, 행정안전부 국·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, 중앙·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.

□ 둘째,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.

○ 지역 소상공인·청년·농어업인·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'속속(速)규제해소'를 연중 추진한다.

○ 또한,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,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·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·허가 기준,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'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'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이와 더불어,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'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'도 발굴할 예정이다.

□ 셋째,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.

○ 그림자 규제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,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이를 조례·규칙에 미반영한 사례, 조례·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.

○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,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·강화할 때 심사 기구 역할을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문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이 밖에,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.

○ 먼저, 지자체를 대상으로 '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'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.

○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(광역, 시·군·구 등)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※ (참고) 최근 3년간 평가 참여 지자체 : ('22년) 64개 → ('23년) 90개 → ('24년) 159개

○ 또한,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·공유하고 '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' 제공,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.

□ 한편, 이날 행사에서는 '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' 결과에 따라, 지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.

○ ▲대통령표창(4점)은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청주시, 충청북도 옥천군, 대구광역시 중구에, ▲국무총리표창(4점)은 강원특별자치도, 경상남도 창원시, 충청북도 진천군, 광주광역시 북구에 수여된다.

□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"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,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	책임자	과 장	김우철 (044-205-3931)
		담당자	사무관	채현숙 (044-205-3937)
			사무관	박재섭 (044-205-393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(요약)

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지방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1 '25년 규제 정비 중점분야 선정

❶ (**지자체 중단·지연 사업 지원**) 법령규제,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을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도모

-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원인*을 분석하여 규제해소 등 맞춤형 애로 해소 추진

* 예시) 법령등 규제로 인해 추진이 곤란한 경우, 지역 내 장기 미사용 중인 국가 시설의 활용 협조가 어려운 경우, 중앙부처 등과의 행정처리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등

< 사업별 맞춤형 애로 해소 추진 과정 >

원인분석	▶	규제애로 절차애로(인허가 등)	▶	지방규제혁신위, 토론회 등 지연사유별 절차 이행 지원	▶	주요 투자사업 정상 추진

❷ (**민생규제 해소**)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, 소상공인·자영업자·청년 등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관련 법령, 조례 등 개선

- 특히, 조례·규칙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허가·지원 기준*을 제공하고 지자체별 자율적 조례 개정 등 정비를 유도

* 공공시설 사용 허가, 청년 사업 지원 기준 등

❸ (**그림자 규제 정비**) 상위법령 개선사항 미반영 규제, 조례·규칙 등에 과도하게 규정되었거나 모호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집중 정비

※ 상위법령 변경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 통해 조정

2 규제 개선의 체계화 · 전문화

❶ (**규제발굴 채널 다각화**) 지자체의 건의 이외에도 직능단체 간담회((가칭) '속速규제해소'*),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민생규제 집중 발굴

* 매월 다양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속 규제를 신속(速)하게 발굴·개선

❷ (**중앙·지방 협업 강화**) 중앙규제책임관의 현장 방문, 지자체별 토론회 개최, 중앙·지방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해결책 모색

❸ (**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전문회의체**) 위원회 심층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별도의 전문회의체*를 구성·운영하여 집중 해소 추진

* 산업단지, 국토개발 분야 등 안건별 책임위원, 관련 전문가, 지자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 논의

3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

❶ (**지자체 성과평가**)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의 전 과정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실시 및 특별교부세 지원

❷ (**지자체 규제개혁위 활성화**) 조례 내 규제 신설·강화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를 규제활동 전반*에 관한 자문기구로 활성화

*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, 기존 규제 정비, 중앙부처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

❸ (**담당자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확산**)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보완, 지방규제혁신 워크숍,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